

조직 노동자들이 세월호 책임 규명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

박근혜는, 40일 단식으로 미라처럼 말라 버린 몸을 이끌고 청와대를 찾아간 ‘유민 아빠’ 김영오 금속 조합원을 ‘만날 이유가 없다’며 경찰을 시켜 ‘몸싸움’으로 밀어냈다.

그 결과, 건강이 더 악화된 김영오 조합원은 결국 8월 22일 병원에 실려갔다. 바로 그날, 박근혜는 ‘세월호’ 정국을 끝내고 ‘민생’ 정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은 서민의 생계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기업 이윤 등 부자들의 수익을 가리키는 기업주들과 그 정치인들의 암호명이다.

결국 박근혜는 노동자 계급 사람들과 그 자녀들의 생명 구조를 외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살아남은 유가족과 나머지 노동자 계급의 삶도 유린하겠다는 것이다.

8월 26일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민영화 등 이윤과 시장 지향적 정책들로 가득하다.

심지어 이참에 “안전 투자 확대, 안전 산업 육성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한다. 안전의 민영화를 본격화하자는 것이



노동자 저항 확대가 김영오 조합원을 살리는 길이다.

다. 세월호 침몰의 일부 원인이 친기업 규제 완화와 민영화인데도 말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된다면, 기업들과 국가 기관들의 부패와 무책임도 입증될 것이다.

그 국가 기관들에는 국정원도 포함될 것이다. 최근 국정원이 유가족 사찰과 음해 공작을 하는 것은 제발 저러 하는 짓일 것이다.

김영오 금속 조합원은 병원에 실려가서도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남은 유가족들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등과 두 차례 면담을 했지만, 예상대로 전혀 진전된 것은 없다.

이런 교착 상태야말로 조직 노동자, 특히 금속 노동자들이 이제는 전면에서 나서서 힘을 보여 줘야 하는 이유다.

세월호 참사는 노동자 계급의 문제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 경쟁 시스템의 수혜자들이 저지른,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윤 경쟁을 하는 기업주들은 이윤에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안전 투자를 외면했다. 심지어 안전 규제를 완화하려고 관련 국가 기관에 로비를 했다.

기업주들과 유착한 정치인과 관료 등은 온갖 규제를 다 풀어 주면서 안전 관리, 구조 업무까지 민영화해 줬다.

그 결과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났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안전 투자와 훈련에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하지 않은 청와대와 해경, 해군 등 국가 기관들은 구조 문제에서도 무관심과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줬다.

침몰부터 구조 실패까지 참사의 모든 과정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한 것은 바로 노동자 계급 사람들과 그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바로 자본주의 이윤 경쟁 시스템이 노동자 계급을 희생시킨 사건인 것이다.

노동자들의 다수가 사고 초기부터 마치

내 일처럼 비통해 하고 분노한 것은 바로 이 본질을 계급 본능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체제에서 늘 이런 참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세월호 참사의 감춰진 진실을 밝혀 내고 참사 책임자들 모두에게 크고 작은 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뿐만 아니라,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주의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과정이다.

이윤 경쟁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 등 각종 민영화, 핵발전, 작업장 안전 등도 의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조직 노동자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한 투쟁에 내 일처럼 나서야 한다.

물론 조합원 자녀가 빗이나 목숨을 잃은 금속노조는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실, “조합원 친인척까지 포함하면 [피해자] 수는 더 많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애초부터 상주가 된 심정으로 희생자 가족과 국

민의 외침에 행동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8월 26일 금속노조 성명)

27일 금속 경기·인천 지부 파업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를 규탄했다. 전교조도 대규모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28일인 오늘도 양재동 현대차 본사 항의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광화문으로 집결해 금속 노동자의 분노와 투지를 보여 줘야 한다.

특히 파업이라는 수단이 뒤따라야 한다. 이윤 시스템 때문에 일어난 일이므로 이윤을 공격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양보와 일부 개선을 얻어낼 수 있다.

이윤 시스템의 다양한 수혜자들이 진실과 책임, 정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거나 비틀어 버리려 애쓰는 지금, 조직 노동자들이 이윤에 타격을 입히는 노동자 계급 고유의 투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26일 성명에서 “이제 금속노조는 투쟁을 제대로 벌일 것이다. 특히 김조합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했다.

우리는 금속노조가 앞장서 “투쟁을 제대로 벌”이기를 염원하며 성원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전혀 비현실적인 요구가 아니다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라는 요구는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사실, 이 법안 자체는 사회 주류의 일부인 대한변협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법학자 수백 명이 법리 상으로든 사법제도 상으로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의회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한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흔치 않은 일이다.

검찰이 법무장관 직속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권 요구가 “사법 체계를 흔든다”는 반대 논리는 정권의 보위가 걱정된다는 말의 치졸한 앞가림일 뿐이다.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옳지 않다.

오히려 구조 방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조사 대상이 돼야 마땅한 박근혜와 그의 총복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다.

부패한 통치자들의 비리와 무책임, 부정직을 조금이라도 밝히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가 꼭 필요하다.

결국,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노동자 계급만이 해결의 열쇠를 쥔 민주주의의 문제다.

함께 참가합시다!

8.30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민대회(가)

일시 : 8월 30일(토) 오후 5시
장소 : 광화문
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임금체계 개악 말고 통상임금 확대하라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금속노조 주력 부대들이 본격적인 파업을 시작하자, 재계와 보수 언론이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경총은 최근 파업을 비난하며 도요타, 지엠, 폭스바겐 등 해외 경쟁 업체들의 임금 인상 자제를 본받으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그룹이 노동자들의 고향을 찢아 찢아놓은 사내유보금만 이미 1백13조 9천억 원이 넘어섰다. 사측은 이미 지불 여력이 충분하다.

정몽구와 정부는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아예 임금·근무체계를 개악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도 동원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사용자들은 올 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모델을 확산·적용하려 해 왔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기본급을 1.9퍼센트만 올리고 성과급 규모를 축소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총액 임금 인상률을 낮췄다.

그런 점에서, 최근 현대차지부의 간부가 한 토론회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장차 기본급화하되, 성과급 재원을 돌려 총액 차원의 변동이 없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우려스럽다.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것은 임금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임금 인상을 자제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여전히 임금 부족분을 매우려고 잔업·특근에 매달리는 장시간 노동 문제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현대차지부 같은 곳에서 나쁜 선례가 생기면, 그것은 현대·기아차 그

룹사 전체 사업장과 부품사를 비롯해 더 많은 사업장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바로 어제(27일) 현대차 사측은 2015년 8+8 근무제 도입을 위해, 엔진 변속기 등에서 심야조를 하나 더 늘리는 3교대제 안을 제시했다. 10년 넘는 투쟁으로 쟁취한 밤샘노동 폐지의 성과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노동자연대는 이미 지난달에 “해외 공

장들에서 3교대제를 도입해 생산량을 늘린 정몽구가 국내 공장에서도 실제 이를 도입하려 할 개연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제 그 경고가 현실로 드러났다. 사측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쪼먹는 밤샘노동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눈 뜨고 봐서는 안 된다. 초장부터 이에 강력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금 현대·기아차 그룹은 현대차 상여금의 고정성 문제를 쥐고, 그룹사 전체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차에서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아 전체의 요구를 묵살하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요 노조들이 이런 조건을 만든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올 초 노동부 지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본격적인 파업이 시작된 지금이 기회다. 금속노조, 특히 현대기아차 그룹사 노조들은 단결해 파업의 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오늘 결의대회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파업 수위를 높이며 공동 투쟁을 전진시키자. 세월호 참사 항의운동, 병원 파업, 금융 파업 예고 등이 잇따르는 지금은 싸워볼 만한 때다.

현대차 사측의 악랄한 분열 시도와 ‘불법파견 면죄부 합의’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 지부, 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18일 ‘직접생산 사내하청 노동자 4천 명 신규채용안’에 합의했다.

정몽구는 끝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 대신 일부 근속만 인정하는 신규채용을 관철했다. 여기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조건이 붙었다.

게다가 사내하청을 유지하고 이를 ‘진성 도급’ 이미지로 포장하기 위한 공정 재배치도 명시했다.

이 같은 합의는 지난 10년 넘게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며 싸워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더구나 삼성전자서비스 등 다른 사내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사측은 법원 선고를 앞두고 악랄하게

노동자들을 가르고 분열시켜 합의를 끌어냈다. 재판에선 각 공정별 조건의 차이를 부각하며 상당수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우겼고, 노동자들에게 “소송 패소자는 모든 희망을 잃을 것”이라며 신규채용안을 수용하라고 협박했다.

딜레마

이 속에서 비정규직 지회들은 재판에서 패소할 공산이 큰 조합원들의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상대적으로 재판에서 불리한 전주·아산 지회는 교섭에 더 매달렸고, 울산 지회가 교섭에서 빠진 상황에서 결국 합의를 체결하는 데 이르렀다.

이는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처한 어려움의 반영이기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2년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약속한 문용문 집행부의 등장과 그 해 2월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계기로 다시금 투쟁의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사측의 공세와 정규직 지도부의 신규채용 압박, 후퇴 종용 속에 투쟁은 더 한층 발전하지 못하고 사그라들었다.

정규직 지도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열망을 받아안아 사측에 맞서기보다, 오히려 사측의 신규채용 압박을 비정규직지회에 전달하는 벨트 구실을 했다. 이 속에서 원하청 연대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겼고, 비정규직지회들도 단호한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사태가 이렇게 발전하자, 비정규직지회 지도부는 조금씩 요구안을 후퇴시켰다. 2012년 8월에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로 후퇴했고, 이듬해 8~9월에는 그에 더해 신규채용 방식까지 수용했다. 올해 교섭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적잖은 노동자들

은 집단적인 투쟁을 통한 대안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규채용이라는 개별적 고육지책으로 이끌렸다.

요컨대, 아산·전주 지회의 신규채용안 합의는 사측의 공세, 정규직지부의 압박, 비정규직 투쟁의 전망 부족 속에서 빚어진 절망과 고통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후퇴는 올바른 대처가 아니었다.

지금 울산 지회와 아산의 일부 조합원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불법파견 면죄부 합의’를 비판하며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 투사들은 지금까지의 투쟁 과정을 돌아보며, 후퇴를 바로잡고 다시금 단결해 싸울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규직 활동가들은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원하청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해 단결 투쟁의 밑거름을 다져 나가야 한다.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시지요.

문의 : 김우용 (기아차 010-3092-9003)
정동석 (현대차 010-8363-5695)